

건설동향브리핑

제536호 (2015. 11. 16)

■ 정책 · 이슈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업계 현실 반영 부족
-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VIII)

■ 경영 · 정보

- 일본의 경영사향심사제도 분석과 시사점

■ 경제 동향

-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비 121.8%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중소건설업체 고사시키는 중기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업계 현실 반영 부족

- 건설업계 경영 여건상 시기상조, 업계 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2016년부터 조선 및 건설산업에 도입될 예정임.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및 조선기업들의 최근 이른바 ‘어닝쇼크’,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회계-공시-감사-감독 등 기업회계 전 부문에서 회계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투명한 회계처리방식 적용, 정보공개 확대, 감사기능 내실화, 분식회계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행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투입원가율(투입법)’에 대한 회계처리 정보의 공시와 적정성을 감사받도록 하였고, 매분기 단위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보고토록 함.
 - 대규모 ‘회계절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청구 공사금액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토록 함.
 - 또한, 공시에 있어서는 투입원가율에 의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요 사업장별로 사업진행률, 미청구 공사금액 및 충당금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토록 함.
 - 감사 부문에서는 ‘핵심감사제’의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추진. 특히, 핵심감사제는 핵심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이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임.
 - 감독에 있어서는 테마 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회계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

■ 평가와 문제점

- 이번 조치는 최근 일련의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주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도 건설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업계에서도 회계보고서상에 상세한 감사 서술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임.
 -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특성상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의 필요성도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임. 또한, 당초 태스크포스팀(TFT)에서 각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개가 논의되었다가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로 한정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
- 그러나, 건설기업들이 처한 최근의 경영여건과 우리나라 기업회계 전반의 시장 여건으로 볼 때 다소 시기상조라는 문제점이 있음.
 - 핵심감사제의 도입과 총공사예정원가의 정기적 공시는 최근의 건설업계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영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원가 산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총공사예정원가 정보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정확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 핵심감사제의 도입도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외부 감사기능 여건상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기업회계 외부 감사기능의 명확한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돌 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 2011년 IFRS 도입에 따른 K-IFRS(한국 채택 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인식 시점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건설기업 부채비율의 급증과 수익성 급감이 우려되었기 때문임.
 - 이번 조치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건설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건설기업과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VIII)¹⁾

- 279개 전통시장의 노후화 및 위해요인 대비 종합 방재사업 필요 -

■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실태

-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 총 333개 중 설립연수가 20년 이상인 곳은 270개소(81.8%)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전통시장 설립 현황>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35년 미만	35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개소	10	22	2	8	7	6	37	220

자료 : 2014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3. 2

- 또한 2014년 4월에 279개 서울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148개의 전통시장에서 위해 요소(위험 또는 주의)가 발견됨.
 - 소방, 전기, 가스, 토목/건축, 기계설비 분야 점검

<서울시 전통시장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결과>

구분	시설물 상태				조치 현황				
	계	양호	주의	위험	계	즉시조치	조치예정	조치권고	기타
개소	279	131	122	26	148	14	41	85	8

자료 : 전통시장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4, 9

■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

- 최근 7년 간 전국의 전통시장 화재를 확인한 결과, 연평균 63건, 총 50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57개소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으로 조사(2014.10, 재난관리과)
- 2015년 4월에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전혀 안전하지 않다+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7.6%인 것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토목학회·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방향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제525호(2015. 8. 24 발간)부터 10회로 나누어 부문별로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제533호(2015. 10. 26 발간)에 이은 8회차임.

으로 조사됨.

- 성능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불량하다+불량하다’로 평가한 시민이 36.9%로 나타나 불안 전 체감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투자 확대에 있어서는 54.9%가 찬성함.
-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이 큰 시설임.
- 2013년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인의 64.8%가 화재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속, 관련 예산은 최근 축소 경향

-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은 2003년에 308억원으로 최대였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사업 예산(억원)	141	308	248	184	82	207	282	304	232	155	155	162	167	202

- 부적합 전기 설비의 교체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2015년도 관련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기존 현대화 사업 확장을 통한 전통시장의 종합방재사업 추진 필요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영세상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전통시장의 안전 이미지 확대를 위한 투자 필요
- 안전평가 D등급 및 E등급을 받은 13개 전통시장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며, 위해 요소가 발견된 시장에 대한 조기 조치도 요구됨.
- 시장별 맞춤형 종합방재사업의 추진 필요
 -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예산 확대를 통한 개선율 향상
 - 내화성능 향상,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해소사업 등 추진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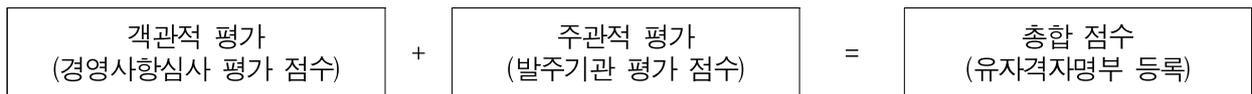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 분석과 시사점¹⁾

- 공공공사 입찰 참가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인 경영사항심사가 필수 -

■ 일본,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부여 위해 객관적 · 주관적 평가 실시

- 일본의 공공 발주기관은 통상 2년마다 건설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영사항 심사 결과와 자체적인 주관적 심사를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 있음.
 - 건설사의 기초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발주기관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데, 바로 ‘경영사항심사’ 제도임. 즉, 어떤 발주기관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일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주관적 평가는 발주기관별로 이루어지며 지역에서의 공사실적 및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로 낮음.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심사를 위한 평가>



■ ‘경영사항심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에 필수

-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는 대표적인 사전 입찰자격심사제도로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일본 「건설업법」 제27조 23에 의해 경영사항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경영사항심사 방법을 보면, ① 각 건설사의 규모, ② 경영 상황, ③ 기술력, ④ 사회성 등의 심사 항목별로 평점을 도출, 이를 토대로 종합 평점을 산출하여 평가함.
 - 각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경영사항심사의 사무취급에 대해’(1998. 6. 8 건설성 경건발 제192호)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 및 종합 평점이 산출되고 있음.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경영사항심사는 건설업 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함. 그 중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평가는 민간 분석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
- 즉, 경영 규모, 기술력, 사회성 등에 대한 평가는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경영 상황 지표에 대한 평가는 민간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경영사항심사 항목 및 기준>

항목 구분	심사 항목	
① 경영 규모	업종별 완성공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액 • 평균 이익액(=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② 경영 상황	① 부채 저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지불이자 비율 • 부채회전기간
	②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 매출총이익률 • 매출액 경상이익률
	③ 재무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대비 고정자산비율
	④ 절대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현금흐름 • 이익잉여금
③ 기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직원 수 (업종별) • 원도급 완성공사액 (업종별) 	
④ 기타 심사 항목 (사회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복지 상황 • 건설업의 영업 계속의 상황 • 방재협정 체결 유무 • 법령 준수 상황 • 건설업의 경리에 관한 상황 • 연구개발 상황 • 건설기계 보유 상황 •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에 의한 등록 상황 	

주 : 1) 평가 항목 및 가중치는 2012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2) 허가 업종별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을 부여하는데, 업종마다 수치가 틀린 심사 항목은 회색 부분이며, 그 외 항목은 업종에 관계 없이 공통의 점수가 됨.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 우리나라는 발주자별로 유자격자명부의 운용이 미흡하며, 유자격자명부를 운용하더라도 등록업자 수가 과다하고, 일본의 경영사항심사 등과 같은 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를 단순히 순위로 나열하고 있어 향후 발주자가 건설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비 121.8% 증가

- 월간 민간수주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경신, 주택 호조세 지속 -

■ 민간 부문 호조... 2008년 12월 이후 최대 실적

- 2015년 9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이 부진했으나, 민간이 큰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21.8% 증가한 18조 5,771억원을 기록함.
 - 18조 5,771억원은 지난 2008년 12월 20조원을 기록한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임.
 - 공공이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진하였으나, 민간에서 대규모 플랜트 수주가 이뤄졌으며 저금리 기조 가운데 주택과 상업용 빌딩 등 건축공사도 양호하여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함.

■ 공공 부문 : 41.3% 감소, 6개월 연속 증가세 마감

- 9월 공공 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9월 실적으로는 13년 내 최저치인 1조 1,908억 원을 기록함. 결국,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하여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 공공 토목 수주의 경우 철도와 도로 관련 수주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6.9% 감소한 9,570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22년 내 최저치인 811억원 기록, 42.8% 감소함.
 - 비주택 건축 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8.9% 감소한 1,527억원을 기록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2015년 9월 건설수주 현황>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 9월	8,377.3	2,029.1	1,516.0	513.1	141.8	371.3	6,348.2	506.0	5,842.2	3,981.6	1,860.6
2015. 9월	18,577.1	1,190.8	957.0	233.8	81.1	152.7	17,386.3	4,730.1	12,656.2	8,154.2	4,502.0
증감률	121.8	-41.3	-36.9	-54.4	-42.8	-58.9	173.9	834.8	116.6	104.8	142.0
2014. 1~9월	63,443.1	17,664.0	11,606.4	6,057.6	2,408.4	3,649.2	45,779.1	4,453.0	41,326.1	27,171.4	14,154.7
2015. 1~9월	95,712.2	18,655.1	13,179.2	5,475.9	2,787.9	2,688.0	77,057.1	9,755.0	67,302.1	45,698.1	21,604.0
증감률	50.9	5.6	13.6	-9.6	15.8	-26.3	68.3	119.1	62.9	68.2	52.6

주 : 민간 수주는 국내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173.9% 급등, 월간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 민간 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양호해 전년 동월비 173.9% 증가한 17조 3,863억원을 기록
 - 이는 월간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전고점인 지난 2008년의 14.2조원보다 2조원 이상 높은 실적임.
 - 토목 수주가 대규모 화학단지 및 발전 플랜트 수주의 영향으로 월간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조 7,30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34.8% 급등함.
 - 주택 수주도 월간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8조 1,542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4.8% 증가함.
 - 비주택건축 수주의 경우 초고층빌딩 수주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4조 5,02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2.0% 증가함.

■ 건축 :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양호, 토목 : 기계 설치, 발전 및 송전 등 양호

- 건축 공종의 경우 공장 및 창고와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
 - 공장 및 창고와 기타의 경우 각각 55.6%, 37.2% 감소해 부진
 -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관공서 등은 각각 99.7%, 242.3%, 51.9% 증가해 양호
- 토목의 경우 도로와 철도는 부진, 반면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등이 크게 증가
 -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는 각각 52.3%, 60.8% 감소하여 부진
 - 기계 설치의 대규모 화학 단지 수주의 영향으로 2,879.3%나 급등한 3조 9,000억원을 기록함.
 - 발전 및 송전 수주도 민간 복합발전소 수주의 영향으로 164.9% 증가한 9,198억원을 기록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 조성	기계 설치	발전 및 송전	조경 공사
2015. 9월	8,235.3	3,770.3	314.4	520.0	50.0	82.8	220.9	231.2	3,900.0	919.8	113.5
증감률	99.7	242.3	-55.6	51.9	-37.2	-52.3	-60.8	-34.8	2,879.3	164.9	121.3
2015. 1~9월	48,485.9	14,078.1	3,707.0	5,091.4	1,415.4	2,474.1	4,388.6	1,915.8	7,206.4	3,971.7	569.9
증감률	63.9	48.7	-0.1	62.8	-5.4	-43.0	46.7	6.6	260.6	90.2	11.4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6	국토교통부	• 수도권정책과 주최,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민간 실무위원으로 참여
11. 9	새정치민주연합 / 을지로위원회 등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상생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
11. 13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주최, '거시경제 전망 TF'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 발표

- 김민형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10일 국회 정성호 의원실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해외건설 지원정책 현황 및 진단'을 주제 발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 과장, 유형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 과장, 장진욱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방설아 KOICA 과장, 이상현 신한은행 팀장, 유기희 서울대 교수, 권재원 평화엔지니어링 회장, 최욱 대우건설 상무, 조성범 덕동산업 부사장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참여

- 연구원은 오는 11월 16~18일 간 일본 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에 참여하여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한국 건설인력의 훈련체계(안)'를 주제 발표할 예정임.
-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양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모임임.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중소건설업체 고사시키는 중기청

중소기업청의 횡포에 중소 건설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해버렸기 때문이다. 2009년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2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자재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재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종합건설사 1만 1,200개사 가운데 상시 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16개사에 불과하며 99%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 4만 3,000여 개사 가운데 99%가 역시 중소기업이다. 즉,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재 납품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공사의 자재 구매 권한을 박탈할 경우 건설 현장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우선, 공사 지연이나 하자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다 보니 현장에서 원하는 성능을 갖춘 자재가 납품되지 못하여 부실 공사나 재시공이 늘어난다. 자재 구매가 늦어질 경우 공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제품만 납품받도록 강요하면서 분양 목적의 공공 아파트 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며, 고난도의 SOC 공사는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더구나 설계·시공을 일괄하는 턴키 공사마저 시공사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하는 것은 발주 방식의 특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주장대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최근 5년 간 건설자재 업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조합에만 가입하면 영업도 필요 없이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레미콘업체는 2008년 701개사에서 2014년 806개사로 105개사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구매’ 제도는 기술력 있는 자재업체를 역차별하며 건설사의 피해를 강제하는 규제다. 만약 이 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과당 경쟁으로 시장 붕괴 우려가 있는 자재 품목으로 국한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고난도 공사나 턴키, 민자 사업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연하지만, 중소 건설사도 엄연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 보호를 명목으로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매일경제, 2015. 11. 3>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 · mschoi@cerik.re.kr)